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5면
대한민국, 드론축구 초대 세계 챔피언 등극

전주매일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음 8월 8일) 제383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타 지역 대형 SOC 순항 속 새만금 국제공항만 '제자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유일하게 '법적 리스크' 직면
'지역 자립성장 기반 확충' 무색해져… 전북은 상대적 박탈감 등 우려

지난 2019년, 낙후된 지방의 자립적 성장을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전북의 핵심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만 홀로 지연 위기에 처하며 국가균형발전 본래 취지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라는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전북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개 사업 중 16개 '순항'… 새만금 공항만 '빨간불'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에 24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계획이다.

현재 이 중 △국도 위험구간 정비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5개 사업은 주요 성과를 나타내거나 단계별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평택-오송 복복선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11개 사업은 공사 진행 중이다. 나머지 사업들 또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2.8km)는 올해 착공되었고, 세종~청주 고속도로(19.4km)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새만금 국제공항과 유사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들은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나 '강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경북 문경-김천 단선철도' 등은 경제성보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인정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1월 착공이 예정됐던 총사업비 8,077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최근 기본계획 취소 판결 등 법적·행정적 리스크로 제때 착공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다

▲'지역 자립성장' 정부 약속 무색… 전북 '상대적 박탈감' 우려

정부는 2019년 당시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에 애로가 있어, 젊은 층의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미를 부여하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사업으로, 이미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사업이다.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핵심 사업으로 명시하는 등,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동일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대로 착공이 늦어진다면 전북만 국가균형발전 흐름에서 뒤처지고,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법적 문제 해결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 정부의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제15회 2025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막식이 지난 2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송하진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막을 축하하고 있다.

시대와 호흡하는 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막

내달 26일까지… 50개국 국내외 작가 참여

제15회 2025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지난 26일 개막을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한 달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예술회관, 14개 시·군 전시장 등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국 서예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아 '고요 속의 울림'이라는 주제 아래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와 호흡하는 서예의 길을 보여주고자 기획됐다.

이날 개막행사는 개회 선포와 그랑프리 작품 발표, 학생서예공모전 시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전 세계 50개국, 국내외 작가 3,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2023년 40개국 참여 대비 10개국이 증가한 수치로, 단순한 국내 행사를 넘어 국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전시의 백미라 일컫는 '서예로 만나는 경전(千人千經)'은 1,000명의 서예인과 종교인들이 천주교·불교·천도교·기독교 등 각기 다른 전통을 담은 경전들을 필사함으로써 서예라는 매개를 통해 화합하고 이해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K-SEOYE ART 전시는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통해 서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디지털영상서예전은 미디어 기술과 결합해 관람객들에게 몰입감 있는 체험을 제공했다. 또한 '자연·사람·한글 먹빛전', '청년 시대소리-정음(正音)' 등 전통과 현대, 국내와 국제를 아우르는 대규모 전시가 펼쳐졌다.

송하진 조직위원장은 "이번 전시는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한국 서예를 중심으로 한 전시작품들로 우리 전통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자 한다"며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통해 서예술의 정서적 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예술적 도전을 응원하는 세대간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과 전시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청, 역사의 뒤안길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1년 유예 거쳐 신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기후에너지부·성평등가족부는 공포 즉시

검찰청 폐지 및 재정경제부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은 공포 즉시 개편이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내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여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예산 편성권 등을 가진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모습이 담길 예정이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뉴시스